

도내 혁신클러스터 2곳 성과 '괄목'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해 조성된 '전북 연구 개발특구'와 '군산 강소 연구 개발 특구' 등 이른바 혁신클러스터들이 지역 전라산업의 혁신성장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연구 개발 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지정돼 융복합 소재와 농생명이라는 특화 분야를 가지고 전주, 완주, 정읍 3개 지구를 중심으로 각종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원, 일자리 창출 2,181명의 성과를 거두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2년 12월) 기준, 전북 특구는 출범(2015년 11월) 당시와 비교해 입주기업은 437개에서 780개로 1.8배, 근로자는 1만6,076명에서 2만 7,600명으로 1.7배, 매출액은 2조 4,268억원에서 3조9,283억원으로 1.6배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북 특구에서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 기업 발굴·지정도 중점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특구별 성과평가에서 2019~2021년(3개년 종합평가) 전국 특구 중 최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전국에서 앞서가는 우수 특구라는 평가다.

강소 연구 개발 특구는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7월 지정된 이래 올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기술 핵심 기관인 국립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원 등 여러 혁신기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기술

기업 19개 설립, 기술이전 109건, 신규창업 35건, 일자리 창출 474명, 매출액 206억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구소기업(두이엔지(주)와 특구기업(쑤미래 엔에스, 쑤더 넥스트, 모나(주) 등)만 상생 협업으로 내연차량을 개조해 친환경 전기차 신시장으로 진입했으며, 군산대학교 창업 보육기업인 이브이엔솔루션(주)은 강소특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 시장을 선도하는 우수사례를 창출해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는 과기부가 주관한 2023년 강소 특구 연차 평가에서 전국 14개 특구 중 군산 강소 특구가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군산 강소 특구는 작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과 더불어 이차전지와 친환경 전기차를 연계, 연관기업을 발굴하고 특구 내 기업을 유치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특화 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V 배터리 전후방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강소 특구에 대한 적극적인 특구 지원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유망기업과 연계해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겠다"며, "기술사업화의 가속화를 통해 전북의 특구 기업이 글로벌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도록 혁신클러스터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연구개발 특구, 특구지정 올해로 9년차... 가시적 성과 이뤄 군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최근 전국평가서 '최우수' 선정 등 호평 양 특구 통해 첨단기술 개발·사업화 가속 등... 전북발전 견인 '기대'

또, '군산 강소 연구 개발 특구'는 지난 2020년 7월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뒤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이란 목표 아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전주 사업화 촉진 지구와 완주·용·복합 소재 부품 거점지구, 정읍 농생명 융합 거점지구 등 3개 지역 16,089km²(487만 평)이 지정돼 있으며, 농생명융합 바이오산업과 융복합 소재·부품 산업을 특화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전북 특구는 2015년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기술이전 373건을 비롯해 기술창업 379건, 투자 유치 1,226억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게 이전해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사업화 모델로, 현재까지 (쑤카)이비오텍 등 234개 연구소기업이 신규 설립됐다.

첨단기술 기업은 특구 내 입주기업 중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 제품 생산을 통해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쑤비)나텍 등 24개가 지정된 상태다.

이처럼 전북 특구는 광역시 중심의 다른 특구와 달리 전북지역 전주(응용 사업화), 완주(융복합 소재), 정읍(농생명 융합) 등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협력을 이끌어가는 기술사업화 전진기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혁신과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4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산 강소 특구는 지난 3년간 기술이전 및 출자 실적 상승뿐만 아니라 투자 연계 실적향상, 입주기업 증가, 연구소 설립 등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매년 특구 발전을 위해 유관기관 및 타 강소특구와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운영, 기술 및 정책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특구 육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연구소

도, 농생명산업지구 실행계획 추진 '속도'

도·시군·참여주체 등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개최 국가·지역 상생 발전·혁신 거점화전략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산업'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특별법 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의 본격적인 실행계획을 보완·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5일 농협중앙회 전북 지역본부에서 도를 비롯해 농생명산업지구(선도, 육성, 예비) 19개소에 참여하는 시·군, 농업인과 농협, 기업, 연구소 등 운영 주체 등 80여명이 참석해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도의 보고에 이어 남원시의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에 대한 사례, 전북연구원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계획, 순창군은 농생명 산업지구의 거점화 방안,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과 연계한 차별화된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전략 등을 내놓았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전통적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생명 자원과 첨단기술이 융합한 농생명 산업으로 전환, 국가·지역의 상생발전 혁신 거점화

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를 지향하는 도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혁신역량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남원 ECO 스마트팜 산업지구는 생산과 가공, 유통, 정주 여건, 기업유치와 창업 등 전후방 사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남원시는 대산면 일대 총 47.1ha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청년농), 스마트팜 혁신단지(가공, 유통 등), 원예단지(R&D 실증단지, 기업유치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 및 청년 보금자리 사업 등을 한곳에 집적화해 청년농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농생명 산업지구 선도지구로 선정된 7개소에 대한 실행계획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인허가예치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한 지구에 대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25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2024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전북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개최

도, 탄소산업 발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협력강화 탄소산업 발전 방안 논의·정책과제 현황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산업 핵심기술 확보 및 기업 지원 등 국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25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2024년 제2차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전북 탄소 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탄소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2016년에 탄소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했으며, 올해 초 제5기 위원회(20명)가 구성되어 2년간 전북의 탄소 산업 발전을 위해 자문

심의,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전북이 주도로 추진 중인 탄소 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6개의 과제가 보고되고,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자문도 이어졌다.

발굴된 과제는 △리사이클링 카본 소재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개발 △탄소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의료 장비 개발 △우주·방산용 복합재 인증센터 구축 △탄소 소재 적용 합성경량화 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재활용 탄소섬유를 이용한 건설자재 개발과 △페 용액 블레이드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기술 과제도 발표되어 탄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만호 기자

1면에 이어... '10월, 더 맛있는 전주'

또한 막걸리축제에는 MZ타겟 과일 막걸리 판매와 막걸리 카페일소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콘텐츠를 보여줄 계획이며, 행사장 한편에서는 전주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전주 시민장터'가 병행된다.

그 외 전주페스타 행사장에는 매주 초대형 드론쇼가 펼쳐지며 '전주한바탕어울림공연'과 '전주한복모델선발대회', '마당창극'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우리놀이', '우리한복' 등 특별 콘텐츠가 운영된다.

특히 마지막 날(26일) 아간에 개최되는 전주페스타 클로징축제에는 전주 종합경기장 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전주종합경기장의 마지막을 시민들과 함께 장식한다.

김대정 전주시 부시장은 "10월 한 달간 매주 전주페스타 행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 통합축제와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전주의 맛과 멋, 흥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전주페스타가 전주를 넘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페스타 2024' 이외에도 10월 전주시 일원에서는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가 잇달아 개최된다. 먼저,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야외무대에서 세계어린이무형유산축제와 경기전을 비롯한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문화유산이행이 개최되고,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팔복동 일원에서는 미래문화축제와 전주예술난장이 전주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어서 10월 19일에는 노송광장을 시작으로 태조어진 봉안례가 펼쳐지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와 10월 26일에는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잔치가 태조로 일원에서 진행되는 등 10월 한 달간 전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오래도록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피지컬 AI 데이터, 담은 초거대 제조모델 모빌리티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4차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 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4차 토론회가 25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유재훈 삼성전자 마스터는 Physical AI와 모빌리티의 융합 가능성을 설명하며,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상 환경에서 AI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AI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성능 AI 엔진과 반도체 기술이 필수적이며,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 생산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현 성균관대 부총장은 AI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데이터의 질과 양이 AI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AI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정우 네이버 AI장은 "AI 에이전트가 사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발전이 AI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모델 크기와 학습 데이터의 양이 AI 성능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은 "자율주행 데이터의 수집 체계가 국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 데이터의 소유권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4차 토론회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제공)

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순민 과실연 AI 미래포럼 의장은 "자율주행, 제조, 가전 분야에서 피지컬 AI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국가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통

해 AI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SKT 부사장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이 AI를 통해 혁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준수사항 위반 집중 조사

장기요양등급자 대상 집중 조사, 10월 초까지 완료 예정 부정수급 시 최대 8년 등록 제한·5배 제재부가금 부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5,000명(총 3,237억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량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 경관

보전, 전략작물)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8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장기 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차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들이 포함되며, 시군에서의 점검 실적이 부족한 경우 도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조사는 오는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255명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전북지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단전을 기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에 달했으며, 그에 따른 금액 조치는 약 1억 3천만 원에 이르렀다.

도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

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농업인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나 시·군 부당수령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농관원의 부정수급 콜센터(1334)를 통해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을 널리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